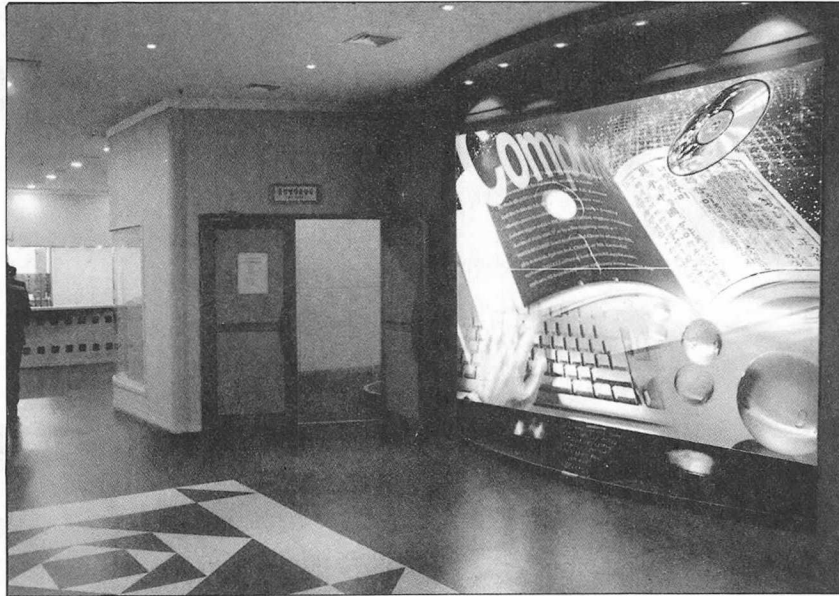


# 국내 최고의 첨단정보를 꿈꾼다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면모 갖추기 시작... 국가적인 투자 요구돼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자료열람실을 새로 꾸미고 정보봉사실, 전자도서관을 개설하여 '전자도서관'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서초동 중앙도서관 1층에 있는 정보봉사실은 터치스크린 형식의 안내 모니터와 도서목록 카드, 온라인 검색 모니터, 노트북 사용공간 등을 마련, 첨단 전자정보시스템을 갖추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자료를 검색하던 김지은양(22)은 "컴퓨터로 검색하니까 자료찾기가 훨씬 수월하다. 예전보다 검색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간접조명과 카페트로 단장한 것도 좋다"고 말한다.



지난 9월 재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

## 정보화시대 발맞춰 새로운 면모

국립중앙도서관의 새로운 면모는 5층에 자리잡은 '전자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3백평 규모에 펜티엄급 PC 151대, CDI, LDP, VOD열람실, CD롬 타이틀 조회실, 인터넷 정보자료실, 멀티미디어 교육장 등을 갖추고 매일 4백여명의 이용객을 소화하고 있다. 아담한 오디오룸과 고성능 오디오 기기도 마련하여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러한 변화는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지원 덕분이다. 93년 8월 LG전자의 기증으로 문을 열었던 전자도서관에 LG에서 10억원, 삼성에서 20억원을 재투입해 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보강하여 지난 9월 재개관한 것. 정부 예산의 안배가 부족한 실정에서 자구책으로 기업의 협찬을 유도한 것인데 문화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평가다.

"전자도서관은 논문과 책, 자료 등을 전자 파일형태로 변환시켜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서목록만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미 이루어진지 오래지만 전자도서관은 그야말로 멀티미디어 정보센터다. 문자, 동영상, 음성정보가 모두 어우러진 자료들로 서가가 채워졌다."

전자도서관을 담당하는 민수해씨(41)의 말이다. 수년내에 5층 전체를 전자도서관으로 꾸밀 계획을 갖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공부방'처럼 이용되는 일반 열람실을 점차 없애고 정보제공이라는 도서관의 제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정보봉사실, 전자도서관을 개설, '전자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국회도서관은 플렉스틀 이미지파일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각종 자료의 디지털화로 네트워크망을 넓히면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도서관은 물론 학위논문과 고문서, 멀티미디어 출판물 등 소장 문헌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2000년까지 박사학위논문·귀중본·고서 등 주요자료 11만종의 본문내용을 멀티미디어 정보로 변환시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모든 장서를 네트워크에 띄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장서 전체를 올리는 것은 효용가치도 없을 뿐더러 저작권문제가 발생한다. 차라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출판사들이 빨리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출판계가 개안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납본시 파일을 받으면 책자를 디지털화하는데 드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민수해씨는 출판계의 발빠른 적응을

요구한다.

국내 미디어 자료들이 없으니 정보에 의한 종속도 심각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확보하고 있는 미디어자료는 총 13만점, 그중 주요 DB는 모두 수입품이다. 전자도서관은 그 내용물인 출판의 발전없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민수해씨는 "전자도서관구축 작업에 장기계획이란 있을 수 없다. 정보환경이나 하드웨어, 그 전송 방식이 순식간에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틀에 중심을 두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선택과 적응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 입법보조에서 정보집적지로 변화

미국에서 서적과 문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의회도서관은 장기적으로 1억 8백만권에 이르는 서적·문서를 전부 CD롬에 기억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입법자료·정기간행물·학위논문 등 1백11만권을 소장하고 있는 우리 국회도서관도 전자도서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금 97년부터 시행될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국회의회의록 플렉스틀을 이미지파일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아직 테스트단계지만 데이터 작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 국회도서관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을 위한 교육도 활발하다.

"전자도서관의 개념 습득과 정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세미나와 교육을 체계적으

로 진행중이다. 국회도서관은 입법 보조기관이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회 정보의 집적과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지만 점차 일반인에게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교육담당 홍정순(36)씨는 말한다.

국회도서관은 입법부 발간자료, 국감 및 정부제출자료, 위원회 소장자료, 외국소재 한국관련자료, 석박사 논문, 정기간행물, 일반도서 수순으로 디지털화할 예정이며 네트워크 망을 넓혀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영희 부이사관은 현재 정부기관과 대학도서관들의 중첩되는 자료 디지털 작업과 저작권문제가 디지털 작업의 걸림돌이라 지적한다.

"디지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작권 문제다. 대처방안은 각 기관이 국가 계획에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작업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장점은 정보의 공유에 있다. 전문화된 정보를 네트로 서로 연결하면 된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행정정보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각 기관별 나름대로 특정정보의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일본은 국가대표 정보집적지가 의회도서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정보의 선택검열문제 때문이라도 거대 정보집합체를 특정 행정부처보다는 여야가 함께 있는 의회에 두는 것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분리된 우리 현실에서는 상호간의 공조와 조율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전국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교육부 3자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5개 기관에서 각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의 문제점 중 하나가 예산이다. 97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산이 확정되겠지만 현재, 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선진화를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민간기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구상도 있지만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마련 없이 권위적인 자세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마정미 기자